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1. 25(금) / 총 3매(본문 2, 참고 1)
담당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이상일, 사무관 정송이, 주무관 김교준 • ☎ (044) 201-3835, 3838
보 도 일 시		2019년 1월 26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25.(금) 15:00 이후 보도 가능	

올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은 안전·성장·소비자 보호 25일 업계 간담회서 자동차 교환·환불제도 적극 참여 등 당부
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5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.

< 간담회 개최 개요 >

- (일시·장소) '18. 1. 25(금) 15:00~,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
- (참석)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, 자동차관리관, 자동차안전연구원장,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, 현대·기아자동차, 한국GM, 쌍용자동차, 르노삼성, 아우디폭스바겐, BMW, FCA, FMK, 포드, 캐딜락, 한불모터스, 혼다, 재규어랜드로버, 벤츠, 닛산, 포르쉐, 도요타, 볼보, MAN트럭버스, 볼보트럭, 다임러트럭, 이베코, 스카니아 등 24개사

- ☐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“안전·성장·소비자 보호”로 삼고, ①첨단자동차 상용화, ②신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, ③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, ④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였다.

- 특히, 작년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,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- 또한,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·환불제도(한국형 ‘레몬법’)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·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“새로 도입된 교환·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.”면서,
 - “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정송이사무관(☎ 044-201-38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최 목적

- 자동차 안전, 소비자 보호 강화, 규제완화 등 '19년 국토부 정책 방향 공유 및 업계 건의사항 논의 등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

□ 개최 개요

- 일시 : '19. 1. 25(금), 15~16시

- 장소 :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

* 서초구 강남대로 263 새움빌딩 7층(양재역 2번출구 도보 200m)

- 참석 : 교통물류실장(주재), 자동차정책관, 자동차정책과장, 자동차 안전연구원장, 자동차산업협회장, 수입자동차협회장,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임원진 등 40여 명

- 주요내용 : '19년 자동차정책 추진방향, 업계 건의 등 논의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5:00 ~ 15:05	5'	인사말씀	교통물류실장
15:05 ~ 15:20	15'	'19년 자동차정책 추진방향 설명	자동차정책과 事
15:20 ~ 15:58	38'	업계건의 등 논의	참석자 전원
15:58 ~ 16:00	2'	마무리 말씀	교통물류실장